
		보도자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보도일시	배포 시	배포일시	2018. 3. 22(목)	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김명규 (044-215-2750)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문지성 (044-215-4710)	담당자	박환조 사무관 (044-215-2751) 안영환 사무관 (044-215-4716)	
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남동우 (02-2100-2850)		김종식 사무관 (02-2100-2852)	
	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 변성식 (02-750-6834)		송길성 과장 (02-750-6888)	
	금융감독원 연구총괄팀장 이훈 (02-3145-8172)		이석 수석조사역 (02-3145-8173)	
	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김동완 (02-3705-6217)		김윤경 팀장(02-3705-6150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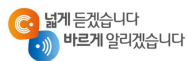
제목: 제55차 「거시경제금융회의」 개최

- 정부와 관계기관은 3월 22일(목) 오전 8: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
 - * 참석자 : 한은 부총재, 금융위 부위원장, 금감원 수석부원장, 국금센터 원장
-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출장중임에도 불구하고, 美 금리인상 소식을 듣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하여 만반의 대응을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고,
- 오늘 회의에서 美 연준의 3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*하였음

* (안건) ① '18.3월 美 연준 FOMC 회의 결과 및 평가
 ②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
 ③ 최근 외국인 주식·채권투자 동향 점검
 ④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여건 동향

-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美 연준 FOMC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음
 -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, 금년중 금리인상 전망은 3회로 유지하였음
 - 다만 최근 수개월간 경기전망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중 금리인상 전망을 2회에서 3회로 상향조정하였음
-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에서는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하였으며, 美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시현하였으나,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
 - 이는 시장이 이번 금리인상을 이미 예상하였고,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美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
- 금번 FOMC 결과를 감안할 때,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, 경계심을 늦추서는 안 될 것임
 - 특히,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韓美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 약 10년 반만에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
- 그러나 외국인 자본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
 - 특히,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%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 상황과 기업실적 전망 등에 좌우됨

- 또한, 나머지 15%인 채권자금은
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
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,
-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
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한편, 정부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하여,
가계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
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음
- 가계부채 총량을 新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,
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음
-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
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음
- 앞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요 이벤트에 빈틈없이 대응하여
불안심리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음
- 미국 등 주요국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의
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
 -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
4~5월 개최 예정인 南北 그리고 北美 정상회담 결과 등이
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음
- 만약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
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
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음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